'여야 2+2' 막판 협상…대통령실·지역화폐 예산 등 팽팽

與野간사 '사전조율' 회동…'정기국회 처리' 공감
"지역화폐 복구 불가" vs "대통령실 대거 삭감"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 속도를 올리기 위해 띄운 '2+2 협의체'가 5일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성일종·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이철규·민주당 박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예산안 협의를 재개한다.

여야 간사들은 오전에 따로 만나기도 했다. 본협상에 앞서 '사전 조율'을 위한 회동이었다.

법정시한(12월 2일)은 넘겼지만 9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데에는 여야 모두 이견이 없는 상태다.

다만 최대 뇌관으로 꼽히는 대통령실 이전·지역화폐 예산 등을 두고는 '강대강' 대치가 이어져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주력 사업에 대해 민주당이 각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전액 또는 대폭 삭감한 것을 '원상회복'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이전은 물론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 운영 예산이 대표적이다. 청년원가주택 등 '윤석열표 예산'도 정부 원안을 사수할 방침이다.

예결위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정부가 새로 추진하는 핵심 사업을 원상회복 시키지 않으면 (여야 협상이)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소위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화폐 예산을 대거 복구해야 한다는 민주당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의 주요 사업을 두고) 민주당이 더 감액해야 한다는 금액이 상당하다"며 "이런 금액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짰던 금액에서 별로 올라간 게 없다. 인건비 상승 정도를 올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감액과 함께 추가적으로 예산을 더 증액할 부분이 있고, 예산 부수법안도 함께 엮여있다"며 "오늘 최대한 (이견을) 좁힐 수 있는 부분은 좁혀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법무부·행정안전부·경찰국 예산 등을 대표적 '낭비 예산'으로 규정, 대대적 감액을 주장하며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초부자감세 철회, 위법 시행령 예산 감액, 민생예산 확충이라는 3가지 심사 원칙을 세웠다"며 "합당한 요구를 여당이 수용한다면 당장이라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라디오에 나와 "대통령실 이전이나 `위법 시행령 통치와 관련한 예산은 용납할 수 없다"며 "거기에서 (감액해) 마련한 재원을 서민과 민생을 위해 써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전액 삭감한 지역화폐 예산은 반드시 대폭 증액하겠다는 생각이다.

예결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통령실 예산과 지역화폐 예산이 가장 견해차가 크다. 정치적 문제가 엮여 있기 때문"이라며 "일단 오늘 협의체에서는 서민경제 관련 예산은 합의를 하고 정치적 성격의 예산은 원내대표 협상 테이블로 넘길 수 있다"고 말했다.

2+2 협의체는 이날까지 협상을 벌이되 합의가 불발된 쟁점 예산은 여야 원내대표까지 합류한 '3+3 협의체'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사실상 원내 지도부 간 '담판'에 맡겨지는 셈이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與, '수도권 대표론' 파장

주호영 "수도권 대처 되는 대표여야"
김기현·조경태 등 영남권 주자 반발

국민의힘에서 차기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와 관련, 이른바 '수도권 대표론' 파장이 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윤핵관 4인방' 및 당 지도부 만찬 회동 이후 전당대회 시간표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차기 당 대표 조건과 관련해 실명이 포함된 구체적인 언급이 현 지도부를 통해 돌출하면서 당 안팎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3일 대구 강연에서 차기 당 대표와 관련, "국회 지역구 의석의 절반이 수도권인 만큼 수도권에서 대처가 되는 대표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당권 도전에 나선 김기현·윤상현·조경태 의원 등의 이름을 열거한 뒤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 안 보인다는 게 당원들의 고민"이라며 "다들 (당원들) 성에 차지 않는다"라고도 했다.

공교롭게도 주 원내대표는 지난달 25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과 회동을 가진 바 있다.

이 때문에 차기 당 대표와 관련한 주 원내대표의 발언이 '윤심'(尹心·윤 대통령 의중)이 실린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으며 당권 주자군들로부터 상반된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당권 주자 후보군 중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출신은 부산이지만 수도권에서 주로 정치 활동을 펼쳐왔고 윤상현 의원과 나경원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도 수도권에 각각 기반을 두고 있다.

반면, 김기현·조경태 의원 등은 영남에 기반을 두고 있다. 권성동 의원은 강원 출신이다.

특히 영남권 주자들은 주 원내대표 발언에 즉각 반발했다.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은 전날 페이스북에 "지역주의에 편승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며 "지난 4번의 총선 결과를 보더라도 최소한 수도권 당 대표를 내세워야 총선에서 승리한다는 주장은 틀렸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윤 대통령과 회동을 하기도 했다.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갑)은 5일 교통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주 원내대표를 향해 "당원들이 봤을 때는 원내대표가 성에 차지 않는다는 말을 많이 한다"며 "자꾸만 편가르기 하는 느낌을 주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직격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尹정부, 야당 파괴에만 몰두"

취임 100일 메시지 "질식하는 민주주의 지켜낼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취임 100일을 맞은 5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국민이 잠시 맡긴 권한을 민생이 아니라 야당 파괴에 남용하는 것은 국민이 용납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민생을 포기하고 야당 파괴에만 몰두 중인 윤석열 정부 200일 동안 정치는 실종했고 대화와 타협은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 정권은 무능, 무책임, 무대책으로 민생경제 파탄, 국민 안전 위협, 민주주의 퇴행, 한반도 평화 위기를 자초했다"며 "정부 여당에 경고한다.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하십시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권의 불공정한 권력 행사와 부당한 권력 남용이 우리 사회를 두려움과 불안 속으로 밀어 넣고 있다"며 "질식하는 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 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지난 100일 동안 민주당은 국민과 당원들의 간절한 여망을 받들기 위해서 민생과 민주라는 '투트랙'을 중심으로 변화의 씨앗을 뿌려 왔다"며 "국민 우선, 민생 제일주의 실천에 매진해 왔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성년 상속자의 빚 대물림 방지법을 비롯해서 시급한 민생 중점법안들을 처리했고, 가계부채 3법,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법안과 정책들도 추진중"이라며 "정부의 초부자 감세, 비정한 특권예산에 맞서 따뜻한 민생예산 관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생과 민주주의를 위해서라면 국민께서 맡긴 권한을 주저 없이 행사하겠다"며 "국민과 국가의 성공을 위해서 정부 여당과도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당원이 주인 되는 민주당 기틀을 마련 중이다. 정당 사상 최초인 중앙당사의 당원존과 국민 응답센터로 소통을 강화했다"며 "당원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게 하려는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진수 기자

신안군, 균형발전 우수사례 선정

국가균형위, 2022년 시상식·발표회 개최

신안군의 '퍼플섬! 낙도(樂島)로 변화된 모습 보라해!!'가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우동기, 이하 균형위)의 '2022년 국가균형발전 사업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균형위는 6일 대구시 인터불고호텔에서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한 지자체와 수행기관을 격려하고 성공 노하우와 혁신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2022년 국가균형발전 사업 우수사례 시상식 및 성과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신안군을 비롯한 총 28개 우수 사례에 대해 20개 광역·기초지자체, 8개 부처사업 수행기관과 51명의 유공자들이 균형발전위원장상을 수상하고, 권역별로 총 5개의 우수 사례 성과를 발표해 공유하게 된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수도권 집중의 가속화, 저성장양극화, 지방소멸위기 등 당면과제에 보다 적극 대응하기 위해 균형발전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

민주·정의 "노란봉투법 반드시 통과시킬 것"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및 정의당은 5일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자들을 옥죄기 위해 악용되는 반헌법적인 손해배상소송을 막아야 한다"며 "무엇보다 구시대적 노조법 2·3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국회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노조법 개정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하나 국민의힘의 반대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소위원회에서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법 개정 논의에 당장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진수 기자